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탈탄소를 하라더니 가격으로 산다" — 협력사 180곳의 익명 답변과, 그 말에 답하듯 나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조달 실행 틀	4
의결권이 개인에게 돌아가자 선택이 갈렸다 — 뱅가드 50만 7,000명, 이사회를 따르는 개인 투표, 그리고 폐지가 검토되는 주주제안 규칙	7
묶여 있는 임팩트 자본을 푸는 두 가지 방법 — 지분을 사고파는 시장, 그리고 금리에서 '공포'를 덜어 내는 계산	9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12
적응에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 일본 은행의 첫 정합성 확인, 102개 적응 활동의 투자성 지도, 그리고 다시 짜진 재보험	12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영시스템이 됐다 — 국제표준 53001의 발행, 그리고 식음료 산업 전용 보고 기준의 착수	14
지역의 돈을 지역에 묶어 두는 오래된 장치들 — 지역개발금융기관, 노동자에게 넘어간 동네 식료품점, 그리고 프랑스의 59년 된 이익 공유 의무	17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19
법의 뼈대에 혈관을 그리는 석 달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된 30개 조항, 그리고 우선구매 3%와 5% 사이	19
목표는 넘겼는데 공장이 덜 돌아왔다 — 지난해 온실가스 5억 9,090만 톤, 그리고 1년 사이 세 배가 된 배출권 가격	21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3
05 이번 호 전망	24
06 지난 전망 점검	25

07 편집장의 글	25
① 선언은 끝났고 견적서가 남았다	25
② 오래된 그릇이 새 그릇보다 쓸모 있을 때	25
③ 좋은 숫자를 의심하는 습관	26

THIS WEEK POINT

협력사들이 익명으로 털어놓은 말은 한 문장이었다. "탈탄소를 하라더니 가격으로 산다." 공급망 탈탄소 협의체가 180곳이 넘는 협력사의 답을 모았더니 43%가 같은 불만을 가장 먼저 꼽았다. 저탄소 제품은 더 비싼데 계약은 여전히 단가로 낙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협력사의 탄소 성과를 가격·물량·계약기간에 직접 연결하라는 조달 실행 틀을 내놓았다. 임팩트의 성패가 지속가능경영팀의 요청서가 아니라 구매팀의 계약서에서 갈린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다.

의결권과 금리와 보험료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미국 대형 인덱스 운용사 벵가드의 의결권 선택 제도에 50만 7,000명이 참여했고, 30세 미만은 38.8%가 ESG 투표 정책을 골랐다. 반대편에서는 이사회 권고를 따르는 개인 투표 프로그램이 대형 금융사로 번졌다. 유엔개발계획 연구진은 케냐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 19.9% 가운데 8%포인트 넘게가 위험을 잘못 짚 결과라고 계산했고, 일본의 대형 은행은 기후 적응 금융으로 국제 기후채권 기준의 정합성 확인을 일본에서 처음 받았다.

한국에서는 같은 질문이 법과 장부로 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만 30개이고, 정부는 11월까지 실무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현장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억 9,090만 톤으로 목표를 4.3% 넘게 줄였지만, 정부 스스로 그 상당 부분을 철강·석유·화학의 생산 감소로 설명했다.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임팩트는 선언문이 아니라 계약서의 기본값에서 결정된다

이번 주 꼭지들을 한 줄로 묶는 연결 고리는 '기본값'이다. 협력사 조사에서 탈탄소가 막힌 곳은 의지가 아니라 구매 계약의 평가 기준이었다. 단가가 기본값으로 남아 있는 한 저탄소 투자비는 회수될 길이 없다. 의결권도 같다. 인덱스 펀드 투자자의 표는 오랫동안 운용사가 정한 기본 정책으로 행사됐고, 이제 그 기본값을 개인이 바꿀 수 있게 되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선택이 갈렸다.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에는 근거 없이 3~4%포인트를 얹는 관행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었고, 재보험 시장에서는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는 동안 고위험 지역 가계의 보험 가능성은 오히려 좁아졌다.

네 장면에 공통인 것은 숫자 하나다. 계약서·정책 선택지·금리 산정표·보험 약관 안에 숨어 있는 기본 설정값이 임팩트의 크기를 정한다. 그래서 이번 주 의미 있는 움직임은 모두 그 기본값을 다시 쓰는 시도였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탄소 성과를 가격과 계약기간에 넣으라고 했고, 뱅가드는 기본 정책을 바꿀 권리를 50만 명에게 넘겼으며, 연구진은 금리에서 '공포 프리미엄'을 덜어 내 자고 했다. 한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시행령의 공공구매 비율과 사회책임조달 평가 항목이 바로 그 기본값의 자리다.

임팩트 조직이 이번 주에 점검할 것은 하나다. 우리가 바꾸려는 결과가 어느 문서의 어느 칸에서 정해지는지 알고 있는가. 캠페인과 협약은 그 칸 바깥에 있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탈탄소를 하라더니 가격으로 산다" — 협력사 180곳의 익명 답변과, 그 말에 답하듯 나온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조달 실행 틀

공급망 탈탄소를 논의하는 자리는 대개 구매하는 쪽이 채운다. 4,000명의 실무자가 모인 협의체 스코프3 피어그룹이 이번에는 반대편에 질문을 던졌다. 회원사에 물건을 파는 협력사들에게 "탈탄소를 요구받는 공급자의 현실에 대해 고객이 가장 알아줬으면 하는 것"을 익명으로 물었고, 180곳이 넘는 협력사가 답했다. 가장 많이, 그것도 큰 차이로 나온 답은 43%가 꼽은 가격 문제였다.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새 설비에 돈을 들여도 실제 계약은 단가로 낙찰된다는 것이다. 협의체 의장은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지속가능경영팀의 요청으로 열심히 감축하고 나면 구매팀이 "탈탄소가 뭐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응답의 4분의 1에 가까운 24%는 두 번째 벽을 지목했다. 고객사가 원재료의 종류와 규격은 물론 원료 공급처까지 정해 놓아서 협력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협력사는 "고객의 사양이 곧 우리의 배출량"이라고 적었다. 데이터 부담도 컸다. 고객사마다 산정 방법과 제출 플랫폼, 형식, 일정이 달라 같은 정보를 여러 번 계산해 넣어야 하고, 제출한 뒤에는 피드백이 없다가 기한을 넘기면 그때 연락이 온다는 답이 나왔다. 응답 협력사 다섯 곳 중 한 곳은 이 일을 할 인력 자체가 없다고 했다. 협력사들이 제안한 처방은 구체적이다. 견적에 탄소를 반영하고 얼마의 추가 대가를 줄지 밝힐 것, 공통 방법과 한 번 제출로 여러 고객에게 쓰는 도구를 쓸 것, 사양을 함께 바꿀 것, 다년 계약과 공동 투자로 투자 회수 근거를 줄 것이다. 같은 주에 유엔글로벌콤팩트가 9월 21일 공개한 '지속가능조달 실행 프레임워크'는 이 요구에 거의 그대로 답한다.

제품 탄소발자국과 과학기반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사용률, 재생원료 비중을 협력사 선정뿐 아니라 가격·구매물량·계약기간에 연계하라고 권고했고, 구매기업이 협력사의 에너지효율 설비나 재생에너지 투자비를 분담하는 방식까지 넣었다. 협력사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리체계도 심사 항목이 됐다. 의류업계에서는 리바이스와 맥스앤스펜서가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자문 조직과 함께 협력사 재생전력 전환을 돕는 공동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들이 인용한 연구는 의류 산업 탄소발자국의 절반 이상이 협력사에서 나온다고 본다. 프랑스에서는 550개 조직을 조사한 구매 관측소의 바로미터에서 전체 협력사를 지속가능성 위험으로 평가하는 조직이 40%에 그쳤다. 구매 부서의 힘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커지고 있지만, 그 힘이 아직 탄소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일본·인도·싱가포르·한국 등 51개 매체가 협력사 조달을 제목에 걸고 82건을 다뤘다(그 전 4주 75건). 이번 협력사 조사는 미국 매체가 1일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국내 ESG 전문 매체가 옮겨 실었다.

한국 시사점 — 국내 대기업도 같은 숫자 앞에 서 있다. 삼성전자는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스코프3 15개 범주 가운데 해당 사업이 없는 1개를 뺀 14개 범주의 배출량과 산정 방법론을 모두 공개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스코프3 배출량은 1억 70만 3,000톤에서 1억 338만 8,000톤으로 2.7% 늘었다. 측정은 정교해졌지만 숫자는 아직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 수출 협력사에게 이번 조사의 의미는 분명하다. 고객사가 보내는 설문은 수를 늘어나는데 그 설문이 단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감축 투자는 협력사 혼자 떠안는 비용으로 남는다. 걸려 있는 것은 감축 의지가 아니라 계약서의 평가 항목이다.



심층 — 지속가능경영팀과 구매팀 사이의 빈칸: 탄소 성과가 단가표에 들어가는 조건 (스코프3 피어그룹 협력사 조사 · 유엔글로벌콤팩트 조달 틀 · 리바이스·맥스앤스펜서 공동 프로그램)

왜 지금 중요한가. 공급망 탈탄소의 병목이 '데이터'에서 '대가'로 옮겨 갔다. 지난 몇 해 동안 대기업은 협력사에 설문을 보내고 1차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고, 지난 호에 전한 에코바디스 보고서처럼 실제 협력사 데이터를 쓰는 기업이 4%에 그친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드러냈다. 협력사는 감축할 의지가 있지만, 감축의 비용을 회수할 상업적 조건이 없다.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구매팀의 성과 지표가 단가 절감으로 남아 있으면 저탄소 제품의 추가 비용은 낙찰 경쟁에서 탈락 사유가 된다. 그러면 협력사는 감축 투자를 미루고, 고객사의 스코프3는 줄지 않으며, 고객사는 다시 더 많은 설문을 보낸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순환의 끊을 지점을 구매 조건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다년 계약과 공동 투자를 먼저 제시하는 구매기업이다. 협력사가 한정된 감축 역량을 어느 고객에게 먼저 쓸지 고를 때, 투자 회수 근거를 주는 고객이 우선 순위에 오른다. 공통 산정 방법과 '한 번 제출, 여러 고객 활용' 도구를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도 승자다. 협력사가 가장 크게 불평한 것이 고객마다 다른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패자는 설문만 보내고 사양은 고정해 둔 고객사다. 원료와 공급처를 직접 지정한 제품에서 협력사에게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배출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고, 그 숫자는 결국 고객사의 보고서로 돌아온다. 인력 한 명이 지속가능성 업무를 맡는 중소 협력사도 단기적으로는 패자다. 감사 가능한 수준의 1차 데이터를 처음부터 요구받으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 대기업 구매팀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탄소를 별도 평가가 아니라 견적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다. 삼성전자처럼 14개 범주를 모두 산정하고 검증까지 받는 단계에 온 기업이라면, 다음 입찰부터 주요 협력사 견적서에 제품 탄소발자국 칸을 두고 저탄소 사양에 지급할 추가 대가의 범위를 미리 밝히는 시범을 해볼 수 있다. 사양 공동 검토는 허락이 필요 없는 일이다. 배출이 큰 원료를 고객이 지정하고 있는 품목부터 협력사와 대체 원료를 함께 검토하는 회의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임팩트 투자사는 피투자 중견 제조사에게 감축 목표보다 '주요 고객과 맺은 다년 계약에 탄소 조건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먼저 조사 표본을 봐야 한다. 응답자는 협의체 회원사에 납품하는 협력사였고 익명이 보장됐다. 불만이 과장됐을 수도, 오히려 덜 말했을 수도 있다. 43%는 응답 가운데 그 주제가 등장한 비율이지 전체 협력사의 대표값이 아니다. 우대 조건이 가격 인상으로만 읽히는 위험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틀은 가점·물량·계약기간을 함께 쓰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를 '저탄소 프리미엄 지급'으로만 해석하면 구매팀의 반발로 시범 자체가 멈출 수 있다. 계약기간을 늘려 주는 것만으로도 협력사의 투자 회수 계산은 달라진다.

출처: [Trellis \(미국, 2026-10\) — What sellers really think about supplier engagement programs](#) · [임팩트온 \(한국, 2026-10\) — 협력사 43% "저탄소 투자해도 구매계약은 가격 우선"...조달조건 개선 요구](#)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UNGC 지속가능조달 기준 공개...협력사 ESG 성과가 가격·물량·계약기간 가른다](#) · [ESG Dive \(미국, 2026-09\) — Levi's, Marks & Spencer launch renewable energy initiative for fashion suppliers](#) · [Novethic \(프랑스, 2026-09\) — RSE : les achats s'imposent comme levier de souveraineté et de résilience](#) · [임팩트온 \(한국, 2026-10\) — 삼성전자, 스코프3 공시 정교화... 기후 재무 손실액 공개는 과제](#)

의결권이 개인에게 돌아가자 선택이 갈렸다 — 벡가드 50만 7,000명, 이사회를 따르는 개인 투표, 그리고 폐지가 검토되는 주주제안 규칙

벡가드가 9월 말 공개한 '투자자 선택' 프로그램의 2026년 결과는 의결권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실험 보고서처럼 읽힌다. 2023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인덱스 펀드 가입자가 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운용사에 맡기지 않고 원하는 투표 정책을 직접 고르게 한다. 올해 참여자는 50만 7,000명으로 지난해 8만 2,000명의 여섯 배가 넘었고, 제도 적용 대상 자산은 약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늘었다. 벡가드는 2027년까지 미국 내 모든 주식형 인덱스 펀드로 넓혀 대상 자산을 8조 달러로 키울 계획이다. 선택지는 다섯 개다.

투자 대상 기업의 이사회 권고를 따르는 정책, ESG 위험의 공개와 대응을 중시하는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ESG 정책, 펀드 자체 정책,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그대로 따르는 정책, 그리고 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ESG 제안을 거부하는 정책이다. 결과는 세대에 따라 갈렸다. 30세 미만의 38.8%와 31~45세의 36.3%가 ESG 정책을 골라 두 집단 모두에서 1위였지만, 46~61세는 19.4%, 62~80세는 16.2%였다. 여성은 25%, 남성은 15%가 ESG 정책을 택했다. 그런데 자산 가중으로 보면 ESG 정책의 비중은 18%에서 12%로 줄었다. 대형 펀드가 새로 들어오면서 고액 자산가와 기관 자금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벡가드는 설명했다. 사람 수로는 ESG가 늘고, 돈의 무게로는 줄어든 셈이다.

같은 주에 골드만삭스가 개인 투자자 투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엑손모빌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 주주가 이사회 권고에 맞춰 표를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 방식을 뒤따르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ESG 쪽으로 기울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의 표를 이사회 쪽으로 모으는 장치가 생기고 있다. 그 아래에서는 규칙 자체가 흔들린다. 지난 호들에서 전했듯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주제안을 다루는 연방 규칙 14a-8의 폐지를 제안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0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수 성향 주주 활동가와 합의해 2027년 주주총회까지 현행 주주제안 문턱을 유지하기로 했고, 12월 8일 총회가 새 시즌의 첫 시험대가 된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한국 5개 나라 9개 매체가 의결권 선택과 주주제안 규칙을 17건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6개 매체 9건이었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서 기관의 의결권 기준을 바꾸는 작업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과 규범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호에 전한 국민연금 첫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와 같은 시기에 나온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제정 이후 올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이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부동산으로 넓어졌고,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근거가 새로 생겼다. 국민연금은 8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걸려 있는 것은 기관이 주주활동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을 위탁한 수익자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벡가드의 숫자는 같은 펀드 안에서도 수익자의 선호가 세대에 따라 두 배 넘게 갈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층 — 의결권의 기본값을 누가 쥐는가: 개인 선택이 넓어질수록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표'가 커진다 (뱅크드 투자자 선택 2026 · 골드만삭스 개인 투표 · 규칙 14a-8 폐지안)

왜 지금 중요한가. 인덱스 펀드가 커지면서 대형 운용사 서너 곳이 미국 상장사 의결권의 큰 몫을 행사하게 됐고, 그 표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의결권 선택 제도는 그 압력에 대한 운용사의 응답이다. 결정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면 운용사는 '우리가 ESG를 밀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번 자료가 보여준 것은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결과가 중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여자 50만 명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일부이고, 고르지 않은 가입자의 표는 여전히 펀드 기본 정책으로 행사된다. 개인 투표를 이사회 권고에 자동적으로 맞추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고르지 않음'이 사실상 '경영진 지지'로 바뀌는 구조가 생긴다. 의결권의 무게중심이 운용사의 판단에서 선택지 설계와 기본값으로 이동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선택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의결권 자문사다. 글래스루이스의 ESG 정책은 젊은 투자자 사이에서 1위였고, 수익 중심 정책을 내세운 다른 자문사도 2025년 선택지에 새로 들어갔다. 자문사 시장이 기관 고객 영업에서 개인 선택지 경쟁으로 바뀌는 셈이다. 경영진도 승자가 될 수 있다. 이사회 권고 연동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낮은 개인 주주의 표를 안정적인 지지표로 바꾼다. 패자는 주주제안으로 기업에 의제를 올려 온 소규모 투자자와 시민단체다.

연방 규칙이 사라지면 제안의 문턱은 주 법과 회사 정관으로 넘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합의로 문턱을 지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린다. 테마 상품 운용사에게는 기회도 있다. 뱅가드의 ESG 전용 미국 주식 ETF 보유자들은 정책 선택 비율을 2023년 73%에서 올해 78%로 높였다. 테마를 보고 들어온 투자자일수록 의결권에 대한 의사가 분명하다는 뜻이고, 운용사는 그 수요를 투표 정책 설명으로 이어 받을 수 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보건복지부가 9월 14일 설명회에서 밝힌 대로 국민연금 이스튜어드십 코드 2.0을 설계하는 지금이 수익자 의견을 묻는 장치를 함께 검토할 시점이다. 국내 공적 연기금이 가입자에게 투표 정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은 제도상 쉽지 않지만,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할 때 세대별 선호 조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ESG 테마 펀드부터 가입자에게 운용사의 의결권 정책 요약과 지난 시즌 주요 투표 결과를 알기 쉽게 보내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일은 허락이 필요 없다.

놓치기 쉬운 함정. 사람 수와 돈의 무게를 혼동하면 오판한다. 젊은 층의 ESG 선택률이 높다는 사실은 자산 가중 비중이 18%에서 12%로 줄었다는 사실과 함께 읽어야 한다. 선택권 확대를 곧 민주화로 읽는 것도 위험하다. 고를 수 있는 정책 목록은 운용사가 정하고, 목록에 무엇을 넣고 빼는지가 결과를 바꾼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된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 운용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의결권 정책을 고르게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이번에 살핀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실태 자료가 나오면 위 처방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Vanguard Finds Younger Investors Choose ESG Voting Policy at Twice the Rate of Older Investors · 임팩트온 (한국, 2026-10) — 뱅가드, 50만명 직접 의결권 선택...젊을수록 ESG 투표 2배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9) — Goldman Sachs to launch retail voting programme · ESG News (이탈리아, 2026-09) — Microsoft difende la voce degli azionisti dalla stretta della SEC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 추진

묶여 있는 임팩트 자본을 푸는 두 가지 방법 — 지분을 사고파는 시장, 그리고 금리에서 '공포'를 덜어 내는 계산

임팩트 투자 업계가 요즘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유동성이다. 투자 회수가 늦어지면서 펀드가 출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출자자는 새 펀드에 넣을 돈이 마른다. 스위스 임팩트 운용사 블루어 스캐피털의 사모 부문 책임자는 이를 "돈이 조금 묶여 있다"고 표현했다. 이 회사가 2024년 만든 임팩트 세컨더리 전략은 기존 출자자의 펀드 지분이나 운용사가 주도하는 거래의 지분을 사들여 묶인 자본을 다시 돌게 한다. 프랑스 개발금융기관 프로파르코가 앵커로 들어왔고, 올여름 루카스 월튼이 세운 빌더스비전 등 미국 투자자들이 합류하면서 약정액이 2억 달러를 넘었다. 목표는 3억 달러이고 지금까지 18건에 투자했다.

일반 사모시장에서는 세컨더리 거래가 한 해 2,000억 달러가 넘지만 임팩트에서는 그런 시장이 아직 없다. 운용 책임자는 전체 순자산의 약 1%가 해마다 거래되는 일반 시장의 비율을 6,000억 달러 규모의 임팩트 시장에 대입하면 연 6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새로 임팩트 포트폴리오를 짜는 재단과 가족 자본에게 세컨더리부터 시작하라고 권한다. 처음부터 직접 투자와 펀드 출자만으로 시작하면 분배가 나오는 성숙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주 다른 쪽에서는 돈이 묶이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짚는 연구가 나왔다.

경제평화연구소와 유엔개발계획 연구진은 케냐 나이로비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연 18~20%의 금리를 내는 동안 같은 수준의 프랑크푸르트 업체는 그 3분의 1을 낸다는 데서 출발했다. 36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지표를 분석해 보니 평균 약 40%가 그 나라의 실제 부도 가능성이 아니라 세계 투자자의 기분에 따라 오르내리는 심리였다. 국제금융공사 등 개발금융기관이 모은 90여 개국 5만 9,000건의 대출 30년 실적을 보면, 이 시장의 기업들은 대출 기관의 짐작보다 훨씬 덜 부도 나고 훨씬 많이 회수됐다. 세 가지 보정을 모두 적용하자 케냐의 전형적인 중소기업 대출 비용은 19.9%에서 15.3%로, 지역 회복력 기여를 반영한 할인까지 더하면 11.7%로 내려갔다.

위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재서 생긴 8%포인트다. 지난 호에 전한 '이미 가진 부도율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싼 개혁'이라는 주장이 한 주 만에 구체적인 금리 계산으로 이어진 셈이다. 연기금도 움직였다. 네덜란드 보험그룹 아크메아의 운용 부문은 개발은행이 만든 신흥국 대출에 네덜란드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임팩트 부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영국 퇴직연금 네스트는 35억 파운드 신흥국 주식 운용을 약 1,000개 종목을 담는 기계적 방식에서 100~150개 종목에 깊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근거 — 같은 주 미국·영국·네덜란드 매체 4곳이 임팩트 자본의 유동성과 신흥국 위험 가격을 각각 다뤘다. 금리 계산은 국제금융공사 등이 모은 90여 개국 5만 9,000건의 대출 30년 실적을 근거로 한다.

한국 시사점 — 지난 호에 전했듯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모태펀드 기반 임팩트펀드 367억 원 조성 and 연 1,500억 원 규모의 임팩트보증 공급을 내놓았다. 한국의 임팩트 자본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돈이 회수될 길과 그 돈의 가격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걸려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정책 펀드가 만기를 맞았을 때 지분을 이어받을 다음 투자자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매기는 금리가 실제 부도 실적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라는 짐작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다.



심층 — 임팩트 자본이 묶이는 두 지점: 나갈 문이 없거나, 들어올 값이 비싸거나 (블루어스 세컨더리 · 경제평화연구소·유엔개발계획 금리 연구 · 아크메아·네스트)

왜 지금 중요한가. 임팩트 투자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모았나'로 성장을 했다. 이번 주 두 이야기는 성장의 병목이 모금이 아니라 순환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컨더리 시장이 없으면 초기 출자자는 만기까지 묶여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대형 자산 소유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금리가 과하게 매겨지면 돈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대출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문제의 공통 원인은 정보 부족이다. 세컨더리 가격을 매길 거래 기록이 없고, 신흥국 중소기업의 위험을 썰 실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문제의 해법은 모두 데이터와 시장 기반시설에 있다. 연 60억 달러라는 임팩트 세컨더리 규모조차 실제 거래 집계가 아니라 일반 시장의 비율을 대입한 추정이라는 점이 이 시장의 미성숙을 보여준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세컨더리 역량과 임팩트 운용사 네트워크를 함께 가진 소수의 운용사다. 블루어스는 500곳이 넘는 운용사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거래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이달 초 스페인 운용사가 만든 1억 2,000만 유로 규모 에너지 전환 세컨더리 기구가 셀의 벤처 부문에서 성장 단계 탈탄소 기업 10곳의 지분을 사들였고, 블루어

스도 출자자로 참여했다. 대기업 벤처 부문이 정리하는 기후 지분이 임팩트 세컨더리의 새 공급원이 되는 셈이다.

새로 임팩트 배분을 시작하는 재단과 가족 자본도 승자다. 세컨더리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짧은 투자 기간을 얻는다. 금리 연구가 맞다면 개발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자료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대출 기관이 과대평가된 위험만큼의 수익을 가져간다. 패자는 막연한 위험 가산금리로 영업해 온 대출 기관이다. 그리고 출자금이 만기까지 묶인 채 새 약정을 못 하는 중소 임팩트 운용사가 단기적으로 가장 어렵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국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책 임팩트펀드의 출자 조건에 회수 경로를 넣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67억 원 펀드가 조성되는 2026년에 출자 약정서를 쓰는 단계라면, 존속기간 말에 지분을 사들일 후속 기금이나 세컨더리 매입 약정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다. 사회연대금융 쪽에서는 지난 호에 전한 사회연대은행의 1,432명 통화 기록처럼 이미 쌓인 상환 실적을 익명화해 공개하는 일이 금리 근거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이 일은 새 예산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임팩트 펀드의 회수 실적과 세컨더리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를 이번에 찾지 못했다. 그 숫자가 나오면 세컨더리 기금이 먼저인지 금리 근거 공개가 먼저인지 판단이 갈린다.

놓치기 쉬운 함정. 세컨더리가 '나쁜 자산 떠넘기기'가 될 위험이 있다. 묶인 지분 가운데 일부는 회수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할인 거래가 늘면 임팩트 펀드의 장부 가치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금리 연구도 마찬가지로 시험 단계다. 연구진은 지금 시장 참여자와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고, 회복력 할인은 아직 실제 대출 계약에서 검증된 수치가 아니다.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임팩트 기업은 금리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대출 기관의 신뢰를 잃는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09\) — Blue Earth Capital on 'unsticking' impact capital and the rise of impact secondaries \(Q&A\)](#) · [ImpactAlpha \(미국, 2026-10\) — Three fixes to correctly price small-business debt in developing economies](#) · [ESG Today \(국제, 2026-09\) — Achmea, ILX Partner to Launch Emerging Markets-Focused Impact Investing Platform](#) · [ESG Today \(국제, 2026-10\) — Wellington Management Wins \\$4.6 Billion Emerging Markets Mandate from Nest to Strengthen ESG Approach](#)

02 현장 들여다보기 — 세계의 임팩트 현장

적응에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 일본 은행의 첫 정합성 확인, 102개 적응 활동의 투자성 지도, 그리고 다시 싸진 재보험

기후 대응의 돈은 오랫동안 배출을 줄이는 '완화' 쪽으로 흘렀다. 피해를 줄이는 '적응'은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무엇이 적응 사업인지, 그 사업이 돈을 버는지 가늠할 기준이 없었다. 이번 주 그 기준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생겼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SMBC닛코증권은 9월 25일 국제 녹색채권 기준을 만드는 비영리기구 기후채권이니셔티브와 적응·회복력 분야 협력 각서를 맺었다. 이 기구는 2025년 8월 적응·회복력을 대상으로 한 기후채권 기준을 만들었고, 같은 해 도쿄도가 발행한 3억 유로 규모 회복력 채권이 이 기준의 세계 첫 인증을 받았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올해 3월 만들고 8월 고친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이 적응 기준과 맞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본에서 처음이다. 체계에는 하천 개수, 토사 재해 방지 시설, 해안 보전, 시설 침수 대책, 비상 전원, 고효율 냉방, 기후 대응 작물 품종,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자금 용도로 올라 있다.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 슈로더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함께 적응 투자 틀을 내놓았다. 102개 적응 활동을 기반시설·기술·제품·서비스로 나눠, 적응이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곳과 투자자가 그 가치를 실제 현금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을 구분했다.

연구 결과를 인용해 적응·회복력 해법의 연간 수요가 2030년까지 1조 3,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봤지만, 연기금 쪽 책임자는 "모든 적응 해법이 오늘 순수한 상업 기준으로 투자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채권 시장의 현실은 더 냉정하다. 지난해 1,400개 가까운 녹색채권 체계가 적응을 언급했지만 실제 배분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손실은 이미 현실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어권·북유럽의 경영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94%가 최근 2년 사이 기후변화로 재무 손실을 봤고, 30%는 손실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79%는 자기 회사의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전략 판단에 쓰기에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 비율은 2024년 53%에서 26%포인트 올랐다.

보험 쪽에서는 역설이 보인다. 2023년 대폭 인상 이후 자본이 몰리면서 2026년 1월 갱신 때 세계 재해 재보험료는 위험 조정 기준으로 평균 14.7% 내렸고 일본의 4월 갱신에서도 16% 내렸다. 그러나 2025년 세계 자연재해 보험 손실은 1,070억 달러였고 산불·폭우 같은 2차 재해가 그 92%를 차지해 사상 최대 비중이었다. 재보험사가 버틸 수 있는가와 가게가 보험을 살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로는 2019~2024년 물가를 감안한 주택보험료가 전국 평균 3% 오르는 동안 남부 해안 일부 지역은 25% 넘게 올랐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한국 등 14개 권역 38개 매체가 적응·회복력·재보험을 제목에 걸고 70건을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25개 매체 38건이었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도 적응의 법적 틀이 막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1주년 자료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적응 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활성화를 다음 과제로 꼽았다. 서울 6개 자치구에서는 10분 단위 도시침수 예보가 시범 운영됐다. 기업 쪽 공시는 한 걸음 뒤에 있다. 삼성전자는 9개 시나리오로 물리적 위험을 분석해 가전 부문은 홍수, 반도체 부문은 가뭄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지만 예상 손실액과 위험에 노출된 자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걸려 있는 것은 적응을 '위험 목록'에서 '돈이 붙는 사업 목록'으로 옮길 기준이 누구 손에서 먼저 만들어지느냐다.



심층 — 적응 금융이 상품이 되는 조건: 기준·현금흐름·보험 가능성의 세 고리 (미쓰이 스미토모 정합성 의견서 · 슈로더·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102개 활동 · 재보험 연초 갱신)

왜 지금 중요한가. 적응 금융이 늦었던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정의(定義)의 부재였다. 완화 사업은 줄인 톤으로 성과를 재지만, 적응 사업은 '일어나지 않은 피해'로 성과를 재야 해서 채권 투자자가 자금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1,400개 가까운 녹색채권 체계가 적응을 언급하고도 배분이 미미했던 것이 그 결과다. 이번 주 움직임은 이 공백을 세 갈래로 메운다. 국제 기준이 무엇이 적응인지 정하고, 은행이 그 기준에 자기 체계를 맞추고, 운용사가 그중 무엇이 현금흐름을 낳는지 가려낸다. 기준·발행자·투자자가 같은 언어를 갖기 시작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적응 자금 용도 목록을 일찍 정리한 은행과 지자체다. 도쿄도가 세계 첫 인증 회복력 채권을 낸 데 이어 일본 대형 은행이 정합성 확인을 받으면서, 일본은 적응 채권의 발행 경험과 기준 해석 경험을 동시에 쌓고 있다. 홍수 방어·냉방·조기 경보처럼 요금이나 계약으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도 승자다. 패자는 고위험 지역의 가게와 소상공인이다. 재보험료가 내려가도 그 혜택은 원수보험사의 위험 보유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고위험 지역 가게의 보험료는 따로 오른다. 보험을 못 사면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유럽 감독당국의 경고가 그 연결을 보여준다. 데이터가 없는 기업도 패자다. 손실을 이미 겪은 기업의 79%가 데이터를 믿지 못한다면, 적응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근거가 없다.

한국 적응 — 타이밍·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 자료에서 제정 사실을 밝힌 기후위기 적응법의 하위 기준을 설계할 때가 지금이다. 국내 금융사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녹색금융 체계의 자금 용도에 적응 항목을 명시하고 국제 적응 기준과의 대응표를 만드는 일이다. 일본 은행이 3월에 체계를 만들고 8월에 고친 뒤 의견서를 받은 순서가 참고가 된다.

다른 하나는 기후보험 활성화 과제에 맞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 설계와 연결하는 일이다. 임팩트 투자사는 피투자 기업에게 '최근 2년간 기후로 인한 손실 금액'을 한 줄로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요청은 허락이 필요 없다. 국내에서 적응 채권이 실제로 발행된 사례는 이번에 살핀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발행 계획이 공개되면 위 순서는 발행 준비 쪽으로 앞당겨진다.

농치기 쉬운 함정. 적응 사업에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는 '적응 세탁'이 다음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 냉방 설비 확대는 적응이지만 동시에 전력 수요를 늘린다. 슈로더 틀이 '가치가 있는 곳'과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을 구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재보험료 하락을 위험 감소로 읽으면 안 된다. 분석은 가격 하락이 자본 유입과 경쟁의 결과이며, 이 대로 가면 2027년에는 업계 상당 부분의 수익이 자본비용을 밀돌 수 있다는 중개사 전망과 '안정' 전망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보험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출처: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09) — 三井住友銀行、
気候変動適応ファイナンスでCBS適合性取得。CBIと覚書も · ESG Today (국제, 2026-09) —
Schroders Launches New Framework to Identify, Assess Climate Adaptation Investment
Opportunities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9) — Green bond adaptation financing still
nascent despite increased focus · ESG News (이탈리아, 2026-09) — Il cambiamento climatico
presenta il conto alle aziende: il 94% ha già subito perdite finanziarie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気候変動で保険は成立しなくなるのか ～再保険市場から見る「保険可能性」
の境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2026-10) — 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1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탈탄소 대전환 박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영시스템이 됐다 — 국제표준 53001의 발행, 그리고 식음료 산업 전용 보고 기준의 착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채택된 뒤 10년 동안 기업 보고서의 표지와 아이콘으로 가장 널리 쓰였다. 글로벌 보고 기준을 만드는 GRI에 따르면 기업의 약 80%가 ESG 활동에서 이 목표를 언급한다. 그러나 언급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국제표준화기구와 유엔개발계획은 9월 28일 연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즉 ISO/UNDP 53001을 발행했다. 2024년 두 기관이 함께 낸 지침을 요구사항 표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표준은 조직이 사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해 우선 관리할 목표를 고르고, 목표와 지표를 정하고, 데이터를 모아 성과를 평가한 뒤 다시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표준에서 쓰는 계획-실행-점검-개선 구조 그대로다.

17개 목표를 하나씩 따로 관리하지 말고, 한 사업이 기후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회 목표에는 해를 끼치는 상충 관계까지 함께 평가하라는 요구도 들어갔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결정하라는 문구도 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도 쓸 수 있고, 제3자 인증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사례를 담은 추가 지침은 2027년 초에 나

온다. 표준을 이행하는 방법은 짝을 이루는 53002가 안내한다. 두 기관은 2030년 이후 이 목표를 대체할 새 국제 목표에도 쓸 수 있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같은 주 GRI는 식품·음료 산업 전용 부문 기준 개발에 착수했다. 식품 가공부터 주류·비주류 음료, 담배까지 포괄하고 원료를 대는 농업·양식업·어업의 영향도 다룬다.

GRI는 이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분의 1과 연결된다고 봤고, 근로 조건과 소비자 건강도 핵심 영향으로 꼽았다. 이번 기준은 산업별 기준을 더 빨리 만드는 새 절차를 처음 적용하는 시험대여서,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탄소 쪽에서도 표준 정비가 이어졌다. 국제표준화기구는 9월 11일 탄소중립 표준을 새 판으로 발행하면서 이전 판을 폐지했고, 상쇄보다 감축과 제거를 앞에 두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지난 호에 전한 넷제로 전환계획 표준 초안의 반려와 대조되는 장면이다. 지난 호에 전했듯 추적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세부 목표 139개 가운데 제 9목표에 있거나 적당히 나아가는 것은 36%뿐이다. 목표가 뒤쳐진 해에 그 목표를 관리하는 표준이 나왔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이탈리아·프랑스·일본·한국 등 7개 권역 9개 매체가 이 표준과 식음료 부문 기준을 13건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3개 매체 3건이었다. 국내 ESG 전문 매체는 국제 발행 다음 날 국내 인증 현황과 함께 보도했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은 이 표준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나라다. 한국표준협회는 표준 개발 위원회 ISO/PC 343의 간사를 맡고 있고, 53001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월 3일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국제표준안 기준 인증을 받았다. 식량 기반시설, 농업용수 관리,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목표와 연계한 것이다. 걸려 있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별 사회적 가치 보고가 이 표준의 언어로 다시 쓰일지 여부다. 식음료 부문 기준은 K-푸드 수출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원료 이력 관리에 직접 닿는다.



심층 — 보고에서 관리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인증 가능한 절차가 될 때 바뀌는 것 (ISO/UNDP 53001 · GRI 식음료 부문 기준 · 탄소중립 표준 개정)

왜 지금 중요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금까지 '공유된 비전'이었고, 기업은 자기 사업과 맞는 목표 아이콘을 골라 보고서에 붙이면 됐다. 53001은 그 선택을 감사 가능한 절차로 바꾼다. 왜 그 목표를 골랐는지,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목표 간 상충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는 지난 호에 다룬 흐름, 즉 말의 비용이 오르고 증명의 비용이 내려가는 방향과 맞닿는다. 유럽에서는 근거 없는 환경 주장이 제재 대상이 됐고,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여 주장에도 검증 가능한 관리 절차가 생겼다. 두 기관이 2030년 이후 이 목표를 대체할 새 국제 목표에도 쓸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30년이 지나 목표의 이름이 바뀌어도 조직이 쌓은 절차와 데이터는 그대로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을 이미 운영하는 조직이다. 표준이 기존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돼 있어, 목표 설정과 데이터 관리, 내부 심사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인증기관과 표준기관도 승자다. 표준 개발 간사를 맡은 기관이 자국 인증 시장의 첫 진입자가 되는 구조다. 공공기관도 유리하다. 사업 자체가 공공 목적이라 목표와의 연결 근거를 찾기 쉽다. 수요층도 이미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한 기업만 2만 곳이고, 이들은 적어도 일부 목표에 사업을 맞추도록 요구받는다. 이 기업들이 인증 시장의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패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마케팅 언어로만 써 온 기업이다. 부정적 영향과 상충 관계를 함께 평가하라는 요구는 좋은 이야기만 골라 쓰는 보고 관행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원료 이력 데이터가 없는 중소 가공업체가 대기업 고객의 공급망 요구에 다시 압박받게 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농어촌공사가 9월 초 첫 인증을 받았고 국가표준 부합화가 진행 중이니, 공공기관이 따라 들어올 시점은 내년 경영평가 지표가 정해지기 전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임팩트 기업에게는 다른 경로가 있다.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표준의 절차, 즉 영향 파악·우선순위·지표·내부 점검을 자기 사업 보고서의 목차로 쓰는 것이다. 이 일은 비용이 들지 않고 오늘 시작할 수 있다. 식음료 수출 기업은 GRI 부문 기준의 초안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싼 대비다. 기준이 확정된 뒤 맞추는 것보다 초안 단계에서 국내 원료 공급 구조를 알리는 편이 낫다.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도 이 표준의 사용 대상이므로, 회원 조직을 위한 간이 점검표를 만들어 나누는 것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시작이다.

농치기 쉬운 함정. 인증이 또 하나의 액자가 될 위험이 있다. 관리 절차를 갖췄다는 인증이 실제 목표 기여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품질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이 늘 좋은 것은 아니듯, 53001 인증도 절차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또 어떤 목표를 우선 관리할지 조직이 스스로 정하므로, 부정적 영향이 큰 목표를 우선순위에서 빼는 선택이 절차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독자는 인증 여부보다 '어떤 목표를 빼기로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09) — ISO, UNDP Launch New Standard to Embed SDGs into Corporate Strategy · Trellis (미국, 2026-09) — ISO adopts standard for managing SDG commitments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ISO e UNDP lanciano lo standard per integrare gli SDGs nelle strategie aziendali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ISO·UNDP, 첫 SDG 경영 국제표준 발행...국내 인증도 시작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GRI, 식음료 산업 전용 공시기준 만든다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ISO、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規格ISO14068発行。オフセットより削減・除去優先

지역의 돈을 지역에 묶어 두는 오래된 장치들 — 지역개발금융기관, 노동자에게 넘어간 동네 식료품점, 그리고 프랑스의 59년 된 이익 공유 의무

지난 호에 노동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미국 지주회사를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를 새로 만들 것인가, 이미 있는 것을 살릴 것인가다. 미국 임팩트 매체의 한 기고는 지역 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은행 수는 75% 줄었다. 1984년 약 1만 6,000개의 지역 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39%를 가졌지만 30년 뒤에는 4,000개가 11%를 갖는다. 기고자들은 재단이 대출에 나서자는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은 이미 그 해법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1994년부터 재무부가 인증해 온 지역개발금융기관이다.

2025년 중반 기준 1,378곳이 4,46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연방 자금 1달러가 민간 자금 약 8달러를 끌어온다. 저렴주택 대출을 하는 한 기관은 은행이 꺼리는 개발 전 단계 위험을 떠안고 약 5% 금리로 빌려주며 1달러를 14번 넘게 돌려 1983년 이후 52억 6,000만 달러를 대출했다. 그런데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에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2억 450만 달러, 약 63% 깎자고 제안했고, 상원의원 43명이 현 수준 유지를 요청했다. 인증 기관 수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중반 사이 이미 6% 줄었다. 기고자들은 임팩트 업계가 해마다 새 펀드와 플랫폼을 만들며 이미 있는 기반 시설을 다시 짓는 데 몇 년과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스턴 록스버리에서는 1974년 쿠바 난민이 연 동네 가게에서 시작해 3대가 운영해 온 식료품점 트로피컬푸드가 약 100명의 노동자 소유로 넘어갔다. 종업원 인수 전문 펀드가 자금을 댔고, 가게가 세 든 땅에서는 지역개발법인이 저렴주택 80가구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함께 준비한다. 학계에서는 오래된 제도의 효과를 따진 연구가 나왔다. 프랑스는 196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이익 공유를 의무화했고 1990년 기준을 직원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췄다. 이 변화를 자연 실험으로 삼은 연구는 의무 이익 공유가 생산성에 큰 영향 없이 저숙련 노동자의 보수를 늘린다는 결과를 냈다. 다만 그 돈은 주주와 정부에서 나왔다. 노동자에게 1달러가 갈 때 기업 세금은 약 20센트 줄었다. 캐나다에서는 비영리 조직이 15억 달러 규모 저렴임대주택 매입 기금의 운영을 맡았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한국 매체 4곳이 지역개발금융·종업원 소유·지역 부 순환을 8건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2개 매체 3건이었다. 아직 작은 흐름이지만, 지난 호의 종업원 소유 기사에 이어 두 주 연속 같은 질문이 나왔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서는 지자체가 같은 질문을 이름 없이 먼저 풀어 왔다. 전남광주 영암군은 2024년 11월 전국 첫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시행했고, 수의계약 공사의 97.2%를 지역업체와 맺었다. 정부 사업도 이 방향과 만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구례군은 8월 28일부터 주민 2만 4,00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주민 주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장에 13개 사용처가 입점해 있다. 기후에너지환

경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1차 공모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를 선정했고 2차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접수했다. 걸려 있는 것은 이 돈들이 지역에 머무를 금융 통로다.



심층 — 새 그릇을 만들 것인가, 오래된 그릇을 채울 것인가: 지역 부 순환의 기반시설 문제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 트로피컬푸드 종업원 인수 · 프랑스 의무 이익 공유)

왜 지금 중요한가. 지역 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는 대출과 소유다. 지역 은행이 사라지면 지역 사정을 아는 대출이 끊기고, 가게와 공장이 외부 자본에 팔리면 이익이 밖으로 나간다. 이번 주 이야기들은 두 통로를 막는 장치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은 30년 넘게 대출 통로를, 프랑스의 이익 공유는 59년째 소유의 열매를 나누는 통로를 지켜 왔다. 문제는 이 장치들이 정치적 예산 결정 하나에 흔들릴 만큼 취약하다는 점이다. 연방 자금이 63% 깎이면 1달러가 끌어오던 8달러의 민간 자금도 함께 줄어든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이미 대출 심사·관리·손실 적립 체계와 지역 신뢰를 갖춘 기관이다. 재단이 새 기관을 만드는 대신 이들에게 손실을 먼저 떠안는 자금을 대면, 같은 돈으로 몇 배의 민간 대출을 끌어낼 수 있다.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창업 2·3세대도 승자가 될 수 있다. 트로피컬푸드처럼 종업원 인수 펀드가 있으면 사모펀드 매각 말고 다른 출구가 생긴다. 프랑스 연구에서 이익 공유의 혜택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패자는 새 플랫폼을 만드는 데 몇 년을 쓰는 임팩트 중개기관이다. 기고자들의 지적대로 혁신이라 부르는 것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있는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일이다. 캐나다의 선택도 같은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4억 7,000만 달러와 10억 달러의 저리 대출을 지역 주택 부문이 이끄는 사업에 넣고 자선 자본을 더해 돌려 쓰는 기금을 만들었고, 그 운영을 새 정부 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 맡겼다. 의무 이익 공유에서 비용을 지는 쪽은 주주와 세수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은 지역 부 순환의 정책 수단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지자체 조례와 지역화폐가 동시에 돌아간다. 그런데 이 돈이 지역 안에서 다시 대출되고 투자될 금융 통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자격 요건이 정해지는 11월까지가 이 통로를 설계할 시기다. 방법은 미국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다. 새 기관을 만들기보다 이미 지역에서 대출 실적을 쌓은 신탁·새마을금고·사회적금융기관에 손실 우선 부담 자금을 얹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10월 13일 광명시가 여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은 이 논의를 지자체 단위에서 들어볼 자리다.

농치기 쉬운 함정. 지역에 묶어 두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수익계약을 지역업체에 몰아주는 정책은 지역 부 순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경쟁 부족과 담합의 위험을 안는다. 영암의 97.2%라는 숫자는 성과이자 점검 대상이다. 프랑스 연구도 이익 공유가 고용 결

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줬다. 기준선 직전의 기업은 직원을 더 뽑을 때 이익 공유 비용까지 계산하게 된다. 한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논의할 때는 기업 규모 기준선이 만드는 이 부작용을 먼저 따져야 한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09) — CDFIs: The old new thing · ImpactAlpha (미국, 2026-09) — Why community development is infrastructure, not charity · ImpactAlpha (미국, 2026-09) — Family-owned grocer Tropical Foods goes employee-owned with Apis & Heritage financing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미국, 2026-09) — How Profit Sharing Redistributes Wealth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10) — Canadian nonprofit takes over \$1.5 billion affordable housing fund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농촌형 로컬푸드에서 도시형 공공조달·지역재투자까지: 한국형 CWB의 진화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2026-09) — 농식품부 장관,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상황 점검 및 우리밀가공공장 방문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법의 뼈대에 혈관을 그리는 석 달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된 30개 조항, 그리고 우선구매 3%와 5% 사이

지난 호에 정부 두 부처가 기본법 이후 첫 실행 계획을 내놓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주에는 그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규칙을 놓고 현장이 움직였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를 열어, 9월 세 차례 연속토론회에서 모은 현장 의견을 시행령 과제로 정리했다.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은 9월 15일 공포됐고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법은 7장 28개 조문의 기본법이어서, 어떤 조직을 지원하고 자원을 어떻게 나누며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가를지는 대부분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만 30개다. 발제에 나선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하위법령이 새 행정 부담이 되거나 현장의 자율성을 묶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안을 내놓았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협동조합 출자금과 비영리법인 출연금도 자본금으로 인정하자는 것,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지 말자는 것, 공적 자금의 부실 위험을 민간 중개기관이 혼자 떠안지 않도록 손실 분담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공공구매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시행 초기 2년간 구매 총액의 3%, 이후 5%로 올리고 조직 유형별 구매 실적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서비스 위탁에서는 가격 경쟁을 넘어 지역성, 취약계층 고용, 이용자와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지역사회 재투자를 평가에 넣는 사회적임조달을 주문했다.

발전위원회 사무처 인력의 30%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자는 안도 나왔다. 정부의 답은 신중했다.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고려하면 11월까지 실무안이 나와야 한다고 일정을 밝히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다른 법률과 정합성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에 담을 것과 법 개정으로 풀 것을 구분해 달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은 우선구매 비율을 시행령에 못 박는 데 부담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맞춰 보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도 정책과 예산이 너무 빨리 커지면 조직이 휩쓸릴 수 있다는 속도 조절론과, 지자체 기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국내 6개 매체가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를 제목에 걸고 16건을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5개 매체 12건이었다. 이번 세미나 보도에는 정부 두 부처 담당 과장의 발언이 실명으로 실렸다.



심층 — 시행령이 정할 세 개의 숫자: 자본금 3,000만 원, 우선구매 3~5%, 민간 사무처 30% (한국사회연대경제 하위법령 세미나 · 행안부·중기부 답변)

왜 지금 중요한가. 기본법은 13년 논의 끝에 만들어졌지만, 조직의 일상에 닿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숫자다. 이번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으로 그 숫자가 공개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메커니즘은 세 갈래다. 중개기관 자본금 요건은 누가 사회연대 금융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우선구매 비율은 공공 시장의 크기를 정하며, 위원회 사무처 구성은 정책을 누가 설계하는지를 정한다.

이번 호 첫 꼭지의 협력사 조사가 보여주듯 구매 계약의 평가 기준이 행동을 바꾼다. 공공기관 구매 기준에 사회적책임 항목이 들어가느냐는 한국 사회연대경제에서 같은 자리다. 비율을 정하는 일과 그 비율을 채울 공급 역량을 키우는 일은 다르다. 스코틀랜드는 올해 2월 지역공동체 자산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공공기관에 의무만 지우지 않고, 입찰 경험 없는 중소기업 2만 3,554곳이 등록한 공급기업개발프로그램이라는 실행 기구를 함께 두었다.

승자와 패자. 자본금 요건이 낮아지고 출자금이 인정되면, 그동안 금융 중개 역할을 해왔지만 법인 형태 때문에 배제될 뻔한 협동조합과 비영리 금융 조직이 승자가 된다. 우선구매 비율이 오르고 실적이 공개되면 공공 판로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직접 혜택을 본다. 반대로 패자가 될 수 있는 쪽도 분명하다. 비율만 오르고 공급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중기부가 우려한 대로 공공기관은 실적을 맞추려 필요 없는 구매를 하거나 소수 대형 조직에 물량을 몰아주게 된다. 그러면 비율 상향의 혜택이 이미 큰 조직에 집중된다. 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지역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이라, 의지가 약한 기초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시간표는 분명하다. 행정안전부가 11월까지 실무안을 내야 하므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창은 10월과 11월 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것이다. 중기부가 요구한 공급·수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 즉 업종별로 공공기관에 공급 가능한 품목과 물량, 최근 3년 납품 실적을 연합회 단위로 모아 제출하면 비율 논쟁이 숫자 논쟁으로 바뀐다. 사회연대금융 조직은 자기 기관의 운용 실적과 부실률을 정리해 자본금 완화 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지자체는 법 개정 전까지 표준조례로 기초단체 공백을 메우자는 제안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위임 범위를 넘는 시행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률가의 경고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지정 취소 전 시정명령처럼 법에 근거가 없는 장치를 시행령에 넣으면, 나중에 소송 하나로 제도 전체가 흔들린다. 또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시장에서 자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 판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 예산 변화에 취약해진다. 이번 호 세계 꼭지의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이 연방 자금 63% 삭감안 앞에 선 모습이 그 위험을 보여준다. 공공구매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 설계 단계부터 함께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현장 자율성·다양성 담아야" · 라이프인 (한국, 2026-09) — 해외는 어떻게 부를 묶어두는가 : 스코틀랜드 CWB 입법과 교토의 CBC 실험

목표는 넘겼는데 공장이 덜 돌았다 — 지난해 온실가스 5억 9,090만 톤, 그리고 1년 사이 세 배가 된 배출권 가격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9월 30일 심의·의결한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좋은 소식과 불편한 설명을 함께 담았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억 9,090만 톤으로 연도별 목표 6억 1,760만 톤보다 2,670만 톤, 4.3% 적었다. 순배출량은 2023년 6억 1,010만 톤, 2024년 5억 9,890만 톤으로 계속 줄었지만, 전년 대비 감축률은 3.6%에서 1.8%, 다시 1.3%로 낮아졌다. 목표 초과와 가장 큰 몫은 산업 부문이다. 산업 배출은 2억 3,290만 톤으로 목표보다 2,190만 톤 적었는데, 정부는 그 주요 요인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생산량 감소를 꼽았다. 기술 혁신보다 공장을 덜 돌려 줄어든 '불황형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환 부문은 목표는 맞췄지만 배출이 160만 톤 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3.7TWh에서 58.2TWh로 늘었는데도, 원전 정비일수가 143.5일 늘면서 석탄 발전이 늘었다. 목표를 놓친 부문도 셋이다. 수송은 9,180만 톤으로 목표보다 770만 톤(9.2%) 많았고, 농축수산은 180만 톤(8.4%), 폐기물은 200만 톤(14.0%)을 넘겼다. 숲과 바다가 흡수한 양은 3,810만 톤으로 목표보다

920만 톤 많아 전체 총량을 받쳤다. 앞으로의 부담은 더 크다.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2030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1억 5,430만 톤을 줄여야 하고, 필요한 연평균 감축률은 5.9%다. 지난해 감축률 1.3%의 네 배가 넘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1주년 자료에서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 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5대 다배출 업종을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대 전환 전략은 10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 쪽에서는 지난 9월 초 호에 전한 정부의 크레딧 20만 톤 직접 구매에 이어, 그 시장이 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내 123개 기업은 2028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넷제로 기준을 의무로 적용받는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국내 5개 매체가 온실가스·배출권·탄소시장을 제목에 걸고 20건을 다뤘다. 그 전 4주에는 6개 매체 15건이었다. 이행점검 수치는 위원회 의결 다음 날 국내 매체가 부문별로 보도했고,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일정은 정부 보도참고자료가 직접 밝혔다.



심층 — 숫자가 좋아 보일 때 더 물어야 할 것: 불황형 감축과 비싸지는 탄소 사이의 간극 (2025년도 이행점검 · 기후에너지환경부 1주년 자료 ·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논의)

왜 지금 중요한가. 목표 초과 달성은 정책 성공처럼 읽히지만, 감축의 원인이 생산 감소라면 경기가 돌아올 때 배출도 돌아온다. 이번 이행점검의 가치는 정부가 그 사실을 스스로 적었다는 데 있다. 동시에 탄소의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배출권 가격이 1년 사이 세 배가 됐고 유상할당은 2030년까지 50%로 오른다. 이 두 사실을 함께 놓으면 메커니즘이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의 감축은 생산량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산물이었다. 앞으로는 할당을 사야 하는 비용이 커지면서 감축이 투자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번 호 첫 꼭지에서 본 '탄소가 단가표에 들어가는 순간'이 국가 차원에서도 다가오고 있다.

승자와 패자. 승자는 이미 감축 수단을 사업으로 바꾸기 시작한 기업이다. 국내 ESG 매체의 99개사 분석에서 41개사가 감축 활동을 투자·금융·제품으로 연결한 사례 67건을 보였다. 저탄소 연료로 줄인 배출을 화주에게 넘겨주는 해운사 서비스나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이 그런 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이런 사업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패자는 수송과 폐기물, 농축수산처럼 목표를 놓친 부문이다. 이들 부문은 배출권 시장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의 압력이 잘 닿지 않고, 감축은 보조금과 규제에 기대야 한다. 생산 감소로 목표를 맞춘 철강·석유화학은 경기 회복 시 배출과 할당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이중 부담을 안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고한 한국형 녹색대 전환 전략이 10월 초 발표되고, 이행점검 결과는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기업과 임팩트 투자사가 지금 할 일은 자기 배출량 변화를 생산량 요인과 감축 요인으로 나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에서 한 분해를 기업 단위에서 하면, 지난해 줄어든 배출 가운데 실제 감축 투자의 몫이 얼마인지 드러난다. 이 분석은 외부 허락 없이 내부 데이터로 할 수 있다. 과학기반감축목표에 참여한 123개 기업은 2028년 2월 개정 기준 적용 전에, 자기가 쓰려는 국내 크레딧이 새 기준에서 인정될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같은 질문에 기업들의 답이 같았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농치기 쉬운 함정. 배출권 가격 상승을 감축 성공의 증거로 읽으면 안 된다. 가격은 할당 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린 제도 변화의 결과이고, 실제 감축이 따라오는지는 몇 년의 이행점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흡수원 실적이 목표보다 920만 톤 많았다는 점도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흡수량 자체는 전년보다 90만 톤 줄었다. 흡수원이 총량을 받쳐 주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까지 남은 거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운영 변수도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5TWh 늘었는데도 원전 정비일수가 143.5일 늘자 전환 부문 배출이 160만 톤 증가했다. 설비 정비 일정 하나가 한 해의 감축 성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연도별 숫자 하나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출처: 임팩트온 (한국, 2026-10) — 지난해 온실가스 5억9090만톤…목표 초과 달성, 감축률은 둔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2026-10) — 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1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탈탄소 대전환 박차 · 임팩트온 (한국, 2026-10) — 【박소현의 탄소시장 브리핑】 한국형 자발적탄소시장, 수요에 답할 수 있는가 · 임팩트온 (한국, 2026-09) — 【기획】 국내 대기업 99개사 기후 기회 공시 분석② - 감축 따라가니 신사업이 보였다…41개사서 67건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영국이 상장사 기후 공시 의무화를 접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새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상장사에 의무로 적용하려던 1월 제안을 바꿔, 따르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들이 비용과 런던 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는 것이 배경이다. 새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독청은 2025년 보고서 검토에서 FTSE 350 기업의 92%가 이미 기후 위험을 공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남은 질문은 자율에 맡긴 공시가 시간이 지나도 비교 가능할 만큼 유지되느냐다.

출처: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Reporting climatico, Londra fa marcia indietro sull'obbligo per le quotate · Responsible Investor (영국, 2026-09) — UK FCA switches to comply-or-explain across ISSB reporting

지속가능 펀드가 상반기 수익률에서 앞섰지만 시장 비중은 줄었다.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가 약 9만 9,000개 펀드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상반기 지속가능 펀드의 수익률 중앙값은 4.9%로 일반 펀드 4.0%를 앞섰다. 운용 자산은 4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지만 전체 펀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월 정점 7.2%에서 6.1%로 내려갔다. 상반기 유입액 377억 달러 가운데 2분기 유입은 42억 달러에 그쳤다. 수익률 우위의 상당 부분은 주식 비중이 높은 구성에서 나왔다.

출처: ESG News (이탈리아, 2026-09) — Fondi sostenibili, il sorpasso nel primo semestre 2026: rendimenti al 4,9% contro il 4% dei tradizionali

캐나다 녹색분류체계에 석유·가스를 넣자는 안에 응답자 3분의 2가 반대했다. 캐나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투자자 기구가 7월 공개한 초안에는 석유·가스 상류 생산처럼 수요가 줄어들 고배출 업종의 즉각적인 감축 활동을 담는 '저감' 범주가 있었다. 의견수렴 결과 약 3분의 2가 이를 반대했고, 지지한 4분의 1도 강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채택되면 캐나다는 석유·가스 활동을 분류체계에 넣는 첫 주요 경제국이 된다.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초기 아이디어"라며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Stakeholders Strongly Oppose Inclusion of Oil and Gas in Canada's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스페인 대기업 아홉 곳이 지속가능성의 사업 효과를 숫자로 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스페인 네트워크가 9월 22일 뉴욕에서 발표한 사례집에 따르면 텔레포니카는 2015년 이후 네트워크 트래픽이 9.3배로 늘어나는 동안 트래픽 단위당 에너지 효율을 90% 높여 5억 4,000만 유로 넘게 절감했다. 건설사 사시르는 125개가 넘는 유럽 환경 요구사항에 대응하면서 자연 영향 정보를 요구하는 공공 입찰의 참가 자격을 넓혔다. 이베르드롤라는 2020년 대비 전체 범위 배출을 29%, 로카그룹은 공정 전기화로 직접 배출을 58% 줄였다. 이번 호 첫 꼭지의 질문, 즉 탄소 성과가 입찰에서 값을 받느냐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출처: Diario Responsable (스페인, 2026-09) — La sostenibilidad gana peso como motor de competitividad en las empresas españolas

05 이번 호 전망

이번 호 전망 없음 — 기한과 판정 기준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후보 두 건이 모두 이 지면의 소재(임팩트의 주체·자본·제도) 밖이었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지난 4개 호에서 이 지면은 「몇 개월 뒤 한국에 닿는다」 같은 시기 주장을 46번 했지만, 판정 기준과 기한을 붙이지 않아 맞았는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은 채점에 넣지 않았고, 이번 호부터는 기한과 기준을 붙인 전망만 낸다.

07 편집장의 글

① 선언은 끝났고 견적서가 남았다

이번 주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한 협력사가 익명으로 적은 "고객의 사양이 곧 우리의 배출량"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임팩트와 지속가능성의 언어는 대부분 선언의 형식이었다. 목표를 발표하고,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협력사에 설문을 보냈다. 그 형식이 만든 것은 많은 보고서와 적지 않은 피로였다. 이번 주 꼭지들은 그다음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같은 방향으로 가리킨다.

협력사의 감축은 구매 계약의 평가 칸에서, 의결권의 무게는 선택지의 기본값에서, 신흥국 중소기업의 생존은 금리 산정표의 가산금리 한 줄에서, 적응 금융의 성패는 채권의 자금 용도 목록에서 정해진다. 공통점은 모두 실무 문서라는 것이다. 홍보팀이 아니라 구매팀과 재무팀과 법무팀이 쓰는 문서다. 임팩트 조직이 이 문서의 언어를 읽지 못하면, 선언은 계속 늘어나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는 상태가 이어진다. 반대로 견적서 한 칸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 그 효과는 캠페인 열 번보다 오래간다.

② 오래된 그릇이 새 그릇보다 쓸모 있을 때

이번 주 미국 임팩트 매체의 기고자들은 동료 업계에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새 펀드와 플랫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있는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일인가. 1,378곳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이 30년 넘게 쌓은 심사·관리·신뢰를 새 기관이 몇 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이익 공유도 59년 된 제도이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새 지속가능발전 표준도 품질경영 표준의 오래된 뼈대 위에 섰다.

이 장면들은 혁신의 반대말이 아니다. 효과가 증명된 구조에 새 목적을 실어 보내는 것도 혁신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지금 반대 방향의 유혹 앞에 있다. 기본법이 생기고 새 펀드와 새 보증과 새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이미 지역에서 대출 실적과 신뢰를 쌓아 온 협동조합 금융과 지역 금고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다시 짓고 싶어진다. 시행령에서 중개기관 자격을 정할 때 이 질문을 먼저 물어야 한다.

③ 좋은 숫자를 의심하는 습관

이번 주 한국 정부는 자기에게 유리한 숫자를 내면서 그 숫자의 약점도 함께 적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목표보다 4.3% 적었지만, 그 상당 부분이 철강과 석유화학의 생산 감소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같은 습관은 이번 호의 다른 숫자에도 필요하다. 뱅가드의 젊은 투자자 38.8%가 ESG 정책을 골랐다는 숫자는 자산 가중으로는 그 비중이 18%에서 12%로 줄었다는 숫자와 함께 읽어야 한다.

재보험료가 14.7% 내렸다는 소식은 2차 재해가 보험 손실의 92%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읽어야 한다. 협력사 43%는 익명 응답 가운데 그 주제가 나온 비율이다. 임팩트 분야에서 좋은 숫자는 대개 보도자료의 첫 줄에 오고, 그 숫자를 만든 조건은 아래쪽에 있다. 독자가 이번 주에 하나의 습관만 가져간다면 첫 줄의 숫자를 보는 순간 아래쪽의 조건을 찾는 습관이었으면 한다.

한국의 임팩트 업계가 이번 주에 스스로 물어볼 것은 세 가지다. 우리가 바꾸려는 결과는 어느 실무 문서의 어느 칸에서 정해지는가. 새로 만들려는 그릇과 같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오래된 그릇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좋은 숫자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나온 것인가. 세 질문 모두 다음 달 시행령 실무안이 나오기 전에 답해 둘 만하다.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현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2주 · 전문가판